

#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한 의견서

## 1. 세입예산안의 문제점과 예산편성의 원칙

지난 10월 2일 정부가 최종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7조 7,800억 원, 여기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하여 71조 6,020억 원으로서 각기 전년도 예산대비 12.8%, 13.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특별회계들을 합하면(중복예산 제외) 총 98조 1,375 억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전년도의 13%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세운 긴축의 명분을 특별회계를 통하여 우회하는 사실상의 팽창 예산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골자는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소득 세에서 많은 세수를 확보해 이를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위비 증액, 민생치안 역량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 ▣ 높은 간접세 비중

우선 세입예산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체소득세는 19.6%나 증가하고 그 중에서 근로 소득세만 11%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상속세 세입은 오히려 8.2%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로 교통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 간접세 부담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전체 내국세 증가율이 12.8%인데 반해, 교통세 증가율이 28.9%,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16.7%, 교육세 증가율이 33.1%입니다.<sup>1)</sup>

이는 세수가 모자랄 때마다 적극적인 세원포착노력을 하기보다는 손쉬운 간접세 증가에 의존해온 정부 세정의 문제점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결국 전체 조세구조의 역진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누차 지적되어온 맥주, 냉장고 등 생활필수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제외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 ▣ 놓급생활자들에게만 불리한 조세부담을 증가

세입예산구조에서 역시 주목되는 것은 전체적인 조세부담율의 증가입니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예산상 국세 17.0%, 지방세 4.6% 등 21.6에 이를 전망입니다.

<표 1> 조세부담율 증가추이

1994	1995	1996	1997(안)
20.0%	20.6%	21.2%	21.6%

자료 : 199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국회 사무처 법제예산실, 1996.10.)

정부는 당초 1993년 신경제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율을 1997년까지 22~23% 수준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와 교육부문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 때,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1) 자료 : 1997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재정경제원, 1996. 9. 24)

필연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과연 어느 계층의 회생위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체 세수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율을 척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을 보면, 94년도와 비교해볼 때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무려 35.4%인 반면, 법인세 증가율은 17.3%, 부가세 증가율은 12.1%)에 불과합니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소득자의 탈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세의 공평성과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당초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상속세까지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 현정부의 조세정책인 것입니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전체 세수 중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 2 > 전체 세수 중 간접세 비중

연 도	전체 세수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
1996년	45.8%
1997년	47.2%

자료 : 199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국회 사무처 법제예산실, 1996.10.)

## ▣ 봉급생활자만 축내는 세정은 개선되어야

위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중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벌과 고액재산가들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업과 사업소득자들의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생활필수품을 제외하고, 비리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세무행정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안이한 세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 비합리적인 예산결정과정의 문제점

97년도 예산결정과정 역시 지적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의 강력한 영향력과 정책과정의 비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관변단체 지원예산 증액'(전년대비 125% 증액)과 안보정국을 이용한 '국방비 및 경찰예산 증액'의 시도는 국가예산의 장기 계획적·합리적 편성이 아닌 즉흥적·정치적 결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1997년도 복지예산 확충을 좌절시킨 '국방비 12% 증액'이라는 돌발변수의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결여된 채, 그 동안의 모든 계획과 구상을 한번에 뒤엎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책과정이 아직도 비합리성과 예측불가능성에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할 것입니다.

2) 자료 : 중앙일보 1996.10.23

## ▣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칙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 첫째. 세입구조에 있어서는 당초 정부가 밝혔듯이 조세의 형평성과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
- ▲ 둘째.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성장을 웃도는 재정확대는 되어서는 안되며, 현재의 물가불안을 해소하는 속에서 예산은 편성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어려움과 물가불안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셋째. 선심성 예산이라 할 수 있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액삭감되어야 합니다.
- ▲ 넷째. 복지예산의 증액 등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 ▲ 다섯째. 재정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예산의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관례처럼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과 재정의 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 삶의 질 향상 외면하는 예산편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1. 1997년도 복지예산의 특징

- 1997년도 사회복지예산안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전년대비 19.9% 증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61.9%라는 의욕적인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국방비 12% 증액'이라는 돌발변수에 따른 재조정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후 당정협의과정에서 19.9% 증액으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재특, 농특세, 국유재산특별회계)를 합하면 18.3%의 증가율로 약간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표 1> 참조).
- 이러한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의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고,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복지예산 20% 증가'에 근접하는 것이지만,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예산 재조정과정에서 그간 정부가 공약하였던 의료보험의 급여확대, 노인치매센터 건립, 거택보호자에 대한 주거수당 지원, 무각출 노령연금 등이 무산되는 등 복지개혁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좌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심의과정을 넘겨둔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통상 커다란 수정없이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어온 그동안의 관례를 고려하면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표 1> 1997년도 보건복지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억원)

구 분	96년 예산	97년 요구액	97년 조정안	증 감(%)
<기본적 경비>	1,240		1,328	7.1
<사업비>	22,468		27,087	20.6
사회분야	7,471	12,775	9,366	25.4
생활보호	3,606	5,108	4,353	20.7
복지서비스	3,698	6,865	4,809	30.1
국민연금	167	802	204	22.1
보건의료	2,068	5,004	2,241	8.3
보건	1,102	1,879	988	-10.3
의정	581	1,025	653	12.3
식품, 약품	83	136	37	-56.0
안전본부, 지방청	39	1,125	152	285.7
보건의료기술	262	839	411	56.7
의료보장	12,929	19,133	15,481	19.7
의료보험	9,500	13,136	10,704	12.7
의료보호	3,429	5,997	4,777	39.3
계 (일반회계)	23,707	36,912	28,415	19.9
총계(특별회계포함)	27,444		32,825	18.3

자료: 97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정(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996.9.24)

## 2. 계속되어온 정부의 복지개혁논의

▣ 현정부 출범이후 매년 사회복지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91년에 작성했던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정하였고, 이후 21세기 위원회(1994)와 사회복지정책심의회(1994)의 개혁안등을 거쳐 1995년에는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하여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구상의 주요 내용은 거시적 목표 및 예산계획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거시적 목표의 측면에서는 경제수준의 향상에 걸맞는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로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위원회(1994)는 2005년에 OECD 국가들의 복지수준에 도달할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고, '국민복지 기본구상(1995-6)'에서는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을 세계 32위로 평가하면서 이를 2000년대 초에는 세계 15위로 끌어올리고, G7 수준의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2010년에는 세계 11위를 목표로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 둘째, 구체적 목표의 측면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을 추구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 생산적 복지의 추구, 민영화 및 지방화의 확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목표에 따라 고용보험과 농어민연금 및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생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강조는 '비생산적(?)' 복지의 위축을 결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한 민영화(보육 및 노인시설의 민영화, 개인연금 지원, 자원봉사, 기업의 복지활동 강조 등)는 기초적인 복지투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방화정책 또한 기존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적극적 시책을 결여한 채 오히려 이를 증폭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형 복지모형은 그럴듯한 수사와는 달리 복지투자의 확대를 강력히 억제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예산계획의 측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복지예산을 매년 20% 정도 증액하여 국제적 기대치에 도달한다는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 특별한 예산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정책심의회(1994)는 일반회계 중의 사회복지비를 6년간 매년 20%씩 증액하고 재특과 국민연금기금으로 보완하여, 1994년에 GNP의 0.8%였던 사회보장비를 2000년에는 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복지 기본구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수준이 국제적 평균기대치의 29.2%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2010년까지 매년 20%씩 복지비를 증액하여 국제적 평균기대치를 달성하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우선 확충하자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서 목표치 초산의 근거인 60개국 평균기대치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세계 11위)과는 거리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결국 현정부의 복지개혁 구상은 화려한 수사와는 달리 평균 재정증가율을 약간 웃

도는 정도의 복지예산 증액을 계획한 소극적(reluctant) 구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이상과 같은 개혁논의와는 달리 현정부의 복지비 지출 실태는 이러한 소극적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의 현황과 최근 추세는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회보장 예산이 GNP 1%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1980년대에는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복지비 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었습니다.
- ▣ 그러나 1991년을 고비로 복지비 지출은 정체 내지는 완만한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축소 경향은 1993년 문민정부 탄생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1995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평균적인 재정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1996년에 와서야 복지예산증가율(18%)이 일반회계 증가율(16%)보다 약간 웃도는 정도로 책정되었을 뿐입니다.(1996년도 사회보장비의 비중은 GNP 대비 6.0%, 일반회계 대비 0.9%).

<표 2> 우리나라 사회보장 예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사회보장 예산	일반회계 예산	G N P	사회보장/ 일반회계	사회보장/ G N P
1995	2,921,907	50,141,100	333,529,000	5.8	0.86
94	2,613,623	43,250,000	289,482,300	6.0	0.90
93	2,414,830	38,050,000	266,540,000	6.4	0.90
92	2,148,901	33,501,729	235,880,000	6.4	0.91
91	1,995,858	31,382,261	206,016,500	6.4	0.97
90	1,498,834	27,455,733	171,488,100	5.5	0.87
89	1,142,708	22,046,824	127,400,000	5.2	0.90
88	820,227	18,429,079	123,579,000	4.5	0.66
87	580,300	16,059,629	105,629,800	3.6	0.55
86	456,428	13,800,532	90,543,900	3.3	0.50
85	397,388	12,532,362	78,088,400	3.2	0.51

\* 사회보장예산은 중앙정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예산 중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사회부문 예산 + 보훈 + 근로자복지 예산.

자료: 보건복지부(1995)

### 3. 외국과 비교해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

- ▣ 참고로 서구복지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예산 중의 사회복지비만을 보여주는 <표 2>와 달리 정부와 민간의 사회보험 기여금까지 포함된 통계치입니다. 1994년의 경우 민간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포함한 총 사회보장 재원이 GDP의 5.7%, 지출은 3.7%이었으며, 중앙정부의 지출은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제외하고 1.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표에서 나타나는 수치의 차이는 주로 사회보장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 안팎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 3>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입과 지출의 대GDP 비중

	1993년	1994년	비 고
사회보장 총재원	5.5%	5.7%	민간기여금 포함
사회보장 총지출	3.6%	3.7%	
중앙정부사회보장지출	1.2%	1.21%	공무원 보험료부담 포함
	1.07%	1.09%	공무원 보험료부담 제외
일반정부(지방포함)	1.58%	1.42%	공무원 보험료부담 포함
			공무원 보험료부담 제외

\* 사회보장 범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훈사업과 근로자복지률 포함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일반정부 복지비지출 대비 1992년 (23.4%), 1993년(25.6%), 1994년 (23.4%)였다(국민복지기획단, 1995: 184)

자료: 노인철 외(1996)에서 재구성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국회비준만 남겨놓고 있음) OECD 국가들은 현재 대부분 GDP의 30% 안팎에 달하는 복지비 지출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1980년경에도 이미 평균 20% 안팎의 복지비 지출 수준에 도달하였었습니다.

<표 4> GDP대비 사회지출비의 비중 (OECD)

(단위: %)

	1980	1992	1993
호주	11.68	16.38	
오스트리아	22.34	24.71	25.78
벨기에	25.63	27.01	
캐나다	13.29	19.77	19.75
덴마크	27.63	29.94	30.96
핀란드	18.87	34.78	35.39
프랑스	23.46	27.29	28.73
독일		27.26	28.27
서독	24.98	23.68	24.67
그리스	10.88	16.77	17.24
아일랜드	19.35	20.39	20.06
이탈리아	18.23	24.68	25.00
일본	11.09	12.44	
룩셈부르크	27.40	29.47	30.96
멕시코		3.83	
네델란드	28.71	29.79	30.20
뉴질란드	18.20	22.51	
노르웨이	18.86	29.48	29.32
포르투갈	11.65	15.60	16.37
스페인	16.49	21.41	22.52
스웨덴	30.42	37.07	38.03
스위스		20.63	
터키	4.40	7.16	7.11
영국	18.32	22.84	23.42
미국	12.44	15.55	15.64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 그러나 OECD 국가들의 통계는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구조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교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통계에서 총사회보장 재원 중 정부가 부담하는 몫만을 별도로 추계하여 보면 <표 5>와 같습니다. 이 표는 유럽연합 12개국의 평균 복지비지출 비중을 보여 주고 있는데 GDP 대비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비 지출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 5> 유럽연합 12개국 정부의 평균 복지비 지출

(단위: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정부지출/GDP	6.78	7.54	7.03	7.69	8.15	8.61

\* 정부지출은 사회보호비용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와 비슷. 주택 포함) 을 의미하며, 정부가 고용주로서 기억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은 제외된 수치이다.

자료: EU(유럽연합), Eurostat 1993 에서 재구성.

▣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 수준이 서구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이었을 당시와 비교하거나,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경제발전수준과는 절맞지 않는 지극히 저열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절실하다는 것이 사회복지 관계자들이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 4. 예산 편성의 원칙

##### 첫째. 정부의 복지예산을 향후 5년 동안 GDP 대비 5%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 유럽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호 예산이 GDP 대비 8% 이상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불과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복지현실 및 선진국들의 전례를 감안할 때 GDP 대비 5%의 복지예산 확보는 복지국가를 향한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정부가 2000년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매년 복지예산을 40% 이상 증액하여 GDP 대비 5%의 복지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둘째. 확충된 복지예산은 우선적으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위해 써여져야 하며, 나아가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정부의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공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극빈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또한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전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셋째.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은 정부의 책임성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기 전에 왜곡된 조세, 재정구조의 개혁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우선 그동안 누수되었던 세금에 대한 징세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부당한 조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며, 블로소득 등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재정지출구조의 조정을 통해 경제개발비나 국방비 등 이상 비대화한 세출을 축소하고 복지비를 상대적으로 확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면서, 복지세나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간접세 보다는 직접세 확대를 통한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넷째. 국민에 대한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 현정부는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과 출범 이후 노인·장애인종합대책을 비롯한 각종 복지개혁안 등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 예산(안) 중 대통령 공약사업과 종합대책(안)등에서 제시하였던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몇가지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거택보호자에 대한 주거수당 지원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대통령 선거 공약사항)
- ▲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노인·장애인종합대책(안))
- ▲ 최근 치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었습니다. 치매종합센터 설치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예산의 반영은 없습니다.(노인·장애인종합대책(안))
- ▲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약속 역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 고가의료장비인 MRI에 대한 보험급여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1997년도부터 보험급여 약속사항)

▣ 이와 같이 몇가지의 사례에서 보듯 국민에 대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은 관련 법의 정비, 예산의 책정과 배정, 전문인력의 확충 그리고 행정전달체계의 완비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